

영·호남 벽 허물기 사업 '칩칩산중' ... 가장 높은 산은 '예산'

'동서화합지대' 쟁점과 과제

27조원 넘는 사업 지난해 예산 배정 겨우 수십억

전남 동부권에 집중 ... 목포등 서부권 소외도 문제

정부가 최근 동서통합지대 9곳을 선정했지만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과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동서통합지대는 수 십 년 동안 각을 세워 온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공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개발·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적 안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한 지역에 몰아주기보다는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위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 일각에서 "거역의 예산 투입보다는 민간교류와 관광 활성화 등 돈을 들이지 않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동서통합지대로 선정된 9개 지역 중 동인 사업은 크게 ▲한려대교 ▲남해안 선벨트(Sun Belt) ▲목포~부산 철도고속화 사업 ▲우주항공 클러스터 등이다.

한려대교와 목포~부산 철도고속화는 영·호남의 소통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려대교(예산 1조1770억원)는 여수 상암동~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간 15.4km(해상교량 4.4km)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다.

목포~부산 철도고속화 사업도 호남 소외의 상징이었던 '경전선' 전남 구간을 손보는 것이다. 지난해 말 마

산~진주(43.9km) 개통으로 등 경남 구간은 모두 복선전철화를 완료했지만 전남 구간은 지난해 순천~광양(8km)이 복선전철화 했을 뿐 다른 구간은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다. 보성~목포 구간은 지난해 정부의 예산지원 10억원(총 예산 1조2979억원)에 머물고 있어 목포~부산 철도고속화와 한려대교 건설은 예산 지원이 관건이다.

여수세계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이 포함된 남해안선벨트 사업은 동서통합지대 선정 지역을 두루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벨트 사업은 남해안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선벨트만 제대로 추진해도 동서통합지대 선정 지역들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남해안 선벨트는 24조3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사업 구상 7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사업비 26억원이 배정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늦다.

또 고흡과 사천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이들 지역이 동

서통합지대에 포함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애초 영·호남 각 4개 지역만을 동서통합지대로 선정했지만 고흡을 추가 선정 형태로 포함했다.

이 때문에 "고흡과 사천을 함께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선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자체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동서통합지대의 큰 틀에서 함께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동서통합지대 추진으로 새 정부 초기 관심이 온통 전남 동부권으로만 쏠리는 것도 큰 부담이다. 여수산단 등 대규모 공단이 있는 동부권에 비해 목포 등 서부권이 소외되고 있는데 정부 예산 지원이 동서통합지대로 선정된 동부권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원활한 예산 지원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하며,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법정부처 차원에서 동서통합지대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신종 AI 확산 ... 입국자 발열 감시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H7N9형이 베이징 등 북부로 확산하면서 환자가 60명으로 증가하고 사망자도 13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발열감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소 직원이 중국 허난성 정저우(鄭州) 등지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의 체온을 열감지 카메라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빛동맹' 광주시·대구시 '시민의 기념 숲' 조성

광주, 북구 오룡동에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시와 대구시가 양 지역에 '시민의 기념 숲'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15일 "달빛동맹 공동 아젠다 중 환경생태분야 협력과제로 '광주·대구 시민의 기념 숲'을 상대 도시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의 기념 숲"은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 시민의 숲' 내 1000㎡ 부지에 대구를 상징하는 팔공산 형상화 조형물과 이팝나무, 모감주나무(대구기념물8호) 등으로 조성된다.

"광주 시민의 기념 숲"은 대구시 두류공원내에 무등산국립공원의

주상절리대(입석대) 조형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물, 시목인 은행나무 등으로 꾸며진다.

두 도시는 '광주·대구 시민의 기념 숲'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을 거쳐 11월까지 기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본분 뺀 개천 지방의원들

상당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이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다양

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국 244

93%가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 위원회에 참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심의·의결권 버젓이 행사

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 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를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228개 지방의회는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지방의회의 경우 광주 남구의회와 여수시의회, 함평군의회만이 의원 행동강령(조례)을 제정한 반면, 나머지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위촉서'로, 지방자치제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조사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8736개 위원회 중 68.2%인 5960개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 7479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부산시의회 의원이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여수시의회 의원 11명이 공사 참여업체로부터 300만~1000만원을 받은 사례 등이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감사를 해야하지만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부패의 당사자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거나 내년 지방의회선거에 맞춘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여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광주시의회 경우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윤리강령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들이 관련 위원회를 모두 피하고 있는데도 굳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월권행위"라며 "시의회에서 지난해 행동강령 제정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 낸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논란 재점화

안행부 '연내 도입 추진'

안행부 장관이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다시 점화될 분위기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난 14일 "현실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의회는 수십조 예산을 다루고 1000만명의 시민 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안 맞다"며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안행부 장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소속 의원 정수는 855명

이다.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가 114명, 경북도의회가 63명, 전남도의회가 62명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광역의원 1명에 연봉 5000만원의 유급보좌관 1명을 두게 할 경우 427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사무실 등 부대 비용을 계산하면 427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2006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된 이후 의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또 광주시의회 등 광역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시도했

나 좌절을 겪었다.

안행부는 광역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보수를 받은 광역의원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보좌관까지 되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인당 7명의 보좌인력을 쓰는 국회의원들이 중앙과 지방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유달리 힘든 첫걸음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누려라, 특급생활!

광주 첨단 2지구 '사랑으로, 부영'

- 1,772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 대규모 택지지역의 미래가치
- 임대분양으로 부담없는 내집마련

광주 첨단 2지구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1,772세대 임대분양!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 세대수	납부 방법		입주 (예정일)	문의 전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60㎡	1,184	5,400	33	2013년 4월	062) 368-8323~4
84㎡	588	7,400	43		

*입주 지정 기간: 2개월 *계약금: 1,000만원

- 교통환경** 국도 1호선, 제2순환도로, 고창~담양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 IC의 조성으로 초광역 교통망의 중심이 된 특급 교통환경
- 생활환경** 정부광주합동청사, 식약청, 국제청 등의 공공시설이 5분거리에 위치하며, 대형마트, 놀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근접한 특급 생활환경
- 교육환경** 신홍 우수학교로 초, 중, 고등학교(개교예정)가 단지옆에 조성되며, 광주 과학기술원, 전남대 등이 인접한 특급 교육환경
- 미래가치** 디지털전산업 등 첨단산업단지과 넉넉한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질 연면적 2백만㎡에 이르는 첨단 2지구의 특급 미래가치

입주자를 위한 설치 품목

홈오메이션 / 디지털도어록 / 가스오븐렌지
음식물탈수기 / 행주도마살균기
전자비데 / 세제디스펜서

전·후면 발코니 확장 시공 (새시포함)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http://gwangju.booyoung.co.kr **(주) 부영주택**

*모델하우스: 광주 광역시 서구 농성동 393-54번지

*공급위치: 광주 광역시 북구 신동동 737번지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25층 20개동 1,772세대 및 부대시설
*분양대상: 분양권 취득, 시공사 직원, 시흥 및 시흥 (주)부영주택

공급 일정

특별공급: 4월 17일(수)
1 순 위: 4월 18일(목)
3 순 위: 4월 19일(금)

모델하우스 개관중!

대자연속의 10대 명품 골프장!
무주덕유산리조트 골프장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약문의: 063)322-9000